

'96년 남북 관계 및 정치 정세 전망

노 광 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위원)

1. 남북 관계

1) 냉전의 해체와 변화하는 국제 관계의 성격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탈냉전의 물결이 세계에 몰아쳤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탈냉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특유의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현재의 상황은 그러한 변화를 새로운 질서로 완성시키기 위한 과도기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탈냉전은 세계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영역 확장과 확장된 시장을 둘러싼 독점 자본 사이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경제 불력화 현상, 잇달은 각종 신 라운드는 바로 이 변화된 조건 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축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독점자본의 대응체제에 다름 아니다. 이는 동시에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독점자본이 저개발 국가 및 그 자본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틀이기도 하다. WTO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의 통상 질서를 지배했던 관세 및 무역일반협정(GATT)을 보다 강화시킨 것으로, 법적 강제력을 지니고 있으며 선·후진국 모두를 망라하고 있다. 과거에 다루어지지 않던 농산물과 섬유류 자유교역 범위에 포함하였으며, 새롭게 서비스, 지적 재산권, 반덤핑무역관련 투자 분쟁 해결절차 등에 관한 무역 규범을 도입하였다. 앞으로 WTO는 IMF(국제금융기구)와 함께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두 개의 기둥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주의에 기초한 그린라운드(GR), 경쟁정책라운드(CR), 기술라운드(TR), 불루라운드(BR) 등은 국가간 교역 및 투자 장벽을 허물어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을 더욱 격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시아 자유무역지대(AFTA),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남미공동시장, 유럽연합(EU) 같은 지역 경제블록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겉으로는 지역 각국의 호혜 평등을 주창하나, 실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인접 지역 국가 및 시장에 대해 배타적 지배 거점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짙다.

현 국제 관계의 또 다른 특징은 미국의 영향력 약화와 선진 자본주의 국가간의 대립 격화이다. 소련이 붕괴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단결돼 있던 서방 동맹체제도 그 일체감이 이완되어 서서히 해체되어 가고 있다.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던 나라들이 미국의 보호 속에서 강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경제력을 앞세운 독일과 일본의 위협, 군사적으로는 NATO의 확대 재편성과 새로운 지역 안보 체제 구축 움직임, 대등한 미·일 관계를 지향하는 일본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세계는 양극 체제에서 단극적 다극체제¹⁾로 전환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도 이같은 정세에 바탕을 두고 변화하고 있다. 탈냉전 시기의 미국의 군사전략을 잘 보여주는 것은 1991년 8월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이다. 그간 세계 현명으로서 사회주의 붕괴 정책을 기조로 한 전(全)지구 차원의 군사전략은 소련·동구의 붕괴 이후에는 지역의 위협 요소에 대처하고 각 중심 지역에서 주요 국가와 협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²⁾ 소련이 붕괴되자 이라크나 북한 같은, 반미적인 제3세계국가들에 대한 대응이 군사전략의 주요 과제로 등장하였다.

미국은 일본, 독일 등 전통적 우방 국가들과의 군사동맹체제는 계속 유지하지만, 자국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 국가에게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군사전략을 수정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신국제질서는 주요 선진자본주의국가 독점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되고 있으며, 자국의 모순을 저개발 국가에 전가시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불균형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세계 인구 중 선진국 인구 20%

1) 여기서 단극이란 미국을 지칭하는 것이며, 미국은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면에서 여전히 유일한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김남식(1995), 「민족통일의 길」, 『주간 전국연합 통신』)

2)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는 재정 적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국은 레이건 정권의 군비 확대 이후 해마다 3,000억 달러 가량의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냉전의 승리를 통하여 어렵게 얻은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군사력의 재편을 꾀하여 1990년부터 병력을 25% 줄이는 기반전략체제를 채택하였다. 클링턴 행정부도 군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병력을 냉전의 절정기이던 1985년의 215만 명에서 1995년 이후에는 146만 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가 세계 GNP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후진국 인구 20%는 1.5%밖에 점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간 불균형의 격화와 미래 사회에 대한 발전 전망의 부재는 개발도상국 민중들의 투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편 서구 신보수주의 정권의 위기와 서구 좌파 정당의 부상, 그리고 소련 및 동유럽의 좌파 개혁 세력의 재등장은 탈냉전 이후의 변화하는 신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2)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질서의 변화

급격한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의 냉전 구조 역시 완만하지만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한반도에 강요되었던 분단 구조도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4개 국가의 혼재된 국가 이익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를 중심으로 이끌고 있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보자. 1990년 발표된 동아시아 전략 구상(EASI)에 따르면 미국은 패권적 지도국에서 균형 유지자(조정자)로 역할을 전환하였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수정하였다. 미국 국방부가 95년 2월에 발표한 동아시아 태평양 안보보고서(EASR, 일명 나이보고서)는 내부지향적 외교·안보정책에서 '개입(Engagement)과 확대(Enlargement)'를 기조로 한 신개입주의 전략으로의 전환을 천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군 감축을 끝자로 한 1990년의 EASI를 전면 수정하여 10만명 선에서 미군을 지속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EASR가 내걸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도력 부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무부 대표되는 예방 외교 전략³⁾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발전을 추구하면서, 대북 정책에서도 단계적 군사 공세를 통한 북한 압박전략에서 벗어나 대화를 통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한 미군의 전진 배치를 끝자로 하는 국방부의 정책과 북한에 대한 예방 외교를 중심으로 한 국무부의 전략은 일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점에서는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⁴⁾이라는 공통분모를 매개로 해서 클린턴 행정부가 구사하는 한반도 정책의 양대 축이 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동맹 국가와의 관계 강화보다는 적대 국가와 관계 개선을 꾀하는 변화된 '확대(Enlargement)'전략이다. 과거 제3세계 적대

3) 종래에는 동맹국 안보를 군사적인 의지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근래에 와서 는 군사적 위협요소를 적극적인 외교의 방법으로 사건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이를 '예방 외교'라 한다.

4) 한국의 방위비 부담액은 91년 1억5천만 달러, 92년 1억8천만 달러, 93년 2억2천만 달러, 94년 2억6천만 달러, 95년 3억 달러로 증가해 왔다.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당근과 채찍' 전략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정책은 '독이 든 당근(poisoned carrot)'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과 관계 개선을 피하는 것은 길게는 미국의 영향력을 전 한반도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정책은 북·미 핵협상과정에서, 이후 연락사무소 개설을 통해 보다 뚜렷해 질 것이다. 그리고 95년 12월 15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과의 대북경수로 공급협정문이 체결됨으로써 향후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리라 예상되고 있다.

<표 1> 경수로 공급관련 사업일정

	1996	1997	1998	2002	2003	2004
경수로	부지조사및 부지정비공사	1기 공사착공	2기 공사착공	핵심 부품인도	1기 공사완공	2기 공사완공
북한핵	IAEA입시일반 사찰, 사용후 연료봉 봉인			특별사찰	흑연감소로 및 방사화학실험 실 해체 시작	흑연감소로 및 방사화학 실험실 해체 완료
중유제공		매년 50만톤씩				
북미관계	북미연락사무 소 개설	대표부 설치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은 현재 평양 주재 미국 외교관의 활동 범위, 외교 행낭 수송 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들 때문에 지연되고 있으나 96년 상반기에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평양에 체류할 초대 연락사무소 소장으로 이미 스펜서 리처드슨이 내정되어 한국에서 연수 중이다. 북한에 외교 공관에 준하는 미국의 연락 사무소가 개설된다는 것은 평양에 성조기가 나부끼고 북미간에 적대 관계가 공식적으로 청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베트남의 경우를 보면, 95년 2월 1일 베트남이 워싱턴에 임시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95년 7월 11일, 수교를 하였다. 북한과 미국의 수교도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가시화될 것이다.

이처럼 냉전 체제 붕괴에 따라 한반도에는 그 이전과는 뚜렷이 다른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냉전 체제의 산물인 북방3각체제(조·중·소 군사 동맹 체제)와 남방3각체제(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가 이완되어 가고 있으며, 남·북한에 대한 주변 4강의 교차

승인이 가시화 되고 있다. 한국과 소련의 수교(1990.12), 한국과 중국의 수교(1992.8), 북한과 미국의 연락사무소 설치 합의 및 북한과 일본의 수교 논의 가속화 등은 이전의 대립적 관계가 실제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민족 통일의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분단을 영구화할 수도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강은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평화적인 공존을 바라고 있다. 주변 4강들은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통해 각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넓히려고 경주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민족적 각성과 대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3) 남북 관계

남북 관계는 80년대 말부터 불붙기 시작한 민간 통일 운동의 활성화, 91년 12월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94년 남북 정상회담 논의 등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은 94년 정상회담을 약속했던 호의적 관계는 간 데 없고, 일체의 공식적인 관계는 끊긴 채 경색되어 있다. 이렇게 남북 관계가 경색된 데에는 여러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통일 정책의 영향이 크다.⁵⁾ 경색된 한반도 정세는, 최근 들어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라는 외적 변수에 의해 변화 가능성이 짙고 있다. 경수로협정 타결에 따라 북·미간에 연락사무소 개설이 임박한 데다 미국의 주도로 북한과의 교류와 접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북한 수재에 따른 미국·일본의 쌀 지원, 무역 최혜국 부여(MFN)를 포함한 경제제재 해제방안 검토, 그리고 북한의 우성호 및 미군 실종자 유해 송환, 북한의 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참가 등도 활발한 교류가 가시화 되고 있다.

96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부르토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의 남·북한 동시 방문은 이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갈리 사무총장은 1993년 12월, 남북한을 동시 방문하여 핵문제에 의한 남북의 경색 국면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 체제 수립과 남북간 당국자 회담 재개에 관한 사안이 이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5)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의 기조는 2년 반동안 15번이나 바뀌었다. 1993년 취임사에서의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는 더 나은 수가 없다. 김일성 주석이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고 했던 전향적 기조에서 "북한 정권이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협력상에서 과도한 신축성을 보이고 있다."(1994년 10월 8일 뉴욕 타임즈와의 기자회견)는 대북 강경책까지 그 변화의 폭은 실로 크다.

남북 관계는 정치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휴전 상태에 있으며, 휴전 체제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냉전 체제의 해체 조짐과 함께 정전 체제를 뒷받침하던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가 실제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다.⁶⁾

북한은 미국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평화보장 체제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⁷⁾ 이에 대해 미국과 남한은 기존의 휴전협정을 먼저 준수할 것과 이미 합의된 기본 합의서의 성실한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객관적인 통일 정세는 '북·미관계 발전, 북·일 관계 개선', '남·북관계 냉각'으로 요약된다. 냉전 질서가 변화하고 북한도 이러한 흐름을 점진적으로 수용해 가고 있지만, 이런 외적 상황 변화가 남·북관계의 개선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남북 당국자 사이에 충분한 신뢰가 마련되지 않으면 주변 정세의 급속한 변화에 비해 남북 관계의 변화 속도는 훨씬 느리게 나타날 수 있다.

한반도의 여건 변화를 민족의 통일로 앞당기기 위해서는 94년에 실현되지 못한 남북 사이의 정상회담이 하루 빨리 성사되어야 한다. 남북 사이의 협력을 도모하고 휴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며, 이러한 주요 문제는 남북 정상간의 정치적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하다.

현재 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망 시의 조문 파동에 대한 남한 측의 적대적 태도를 이유로, 남한은 북한의 국가 주석의 공백 상태를 이유로 남북간의 공식 대화를 기피하고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문제가 빠른 시기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⁸⁾ 북한 리종욱 수상이 이야기한 대로 북한의 국가 주석직 공백이 '3년상 관습에 따른 것'이라면 1997년 6월이 지나야만 주석직 승계가 이루어진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한편 북한을 공격하는 입장에서 총선을 치르는 게 더욱 유리하다는 현 정권의 인식도 남북 관계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조건이라 판단된다.

6) 북한은 94년 5월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실을 폐쇄하였으며, 94년 9월 2일에는 정전위원회에 파견된 중국측 대표들도 송환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앞서 1991년 3월 군사정전위 유엔측 수석 대표들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한바 있는데 이에 대해 북한과 중국이 반대함으로써 정전위원회의 모든 회의가 중단되었다. 또한 1993년 4월 체코슬로바키아, 1995년 2월 폴란드 대표단이 철수하여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사실상 해체되었다

7) 이러한 주장의 배경으로는 1991년 북한이 유엔이 가입함으로써 북한은 유엔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받아야 함으로 북한과 유엔과의 휴전 상태는 비정상적이라는 것, 최근 북한과 미국 사이의 상호 연락 사무소가 설치되는 등 북미 관계가 적대 관계에서 정상적인 관계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8) 북한은 남한 당국의 비자주적이며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이 지속되는 한 현 김영삼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김영삼대통령도 96년 10월 일본 '니혼게이지신문'과의 회견에서 '주석도 없는데 정상회담을 할 시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현 정부 초기의 민족적 관점을 앞세운 통일 정책과 이에 화답하는 북한 당국의 유연한 태도 변화가 어느 때보다도 다시 요구되는 시점이다. 21C를 5년 남겨 둔 세기말에 조성된 통일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힘과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종교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북한 수재 동포 돕기 운동'은 갈등의 민족 상처를 치유하고 냉전적 대결 의식을 청산하는 작지만 필요한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민족사의 대전환기에 접어든 1996년은 노동운동의 높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냉전 시기 분단 체제는 오랜 세월 동안 노동자가 이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억눌러 왔다. 노동자가 자신의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조직하고 연대하는 것을 철저히 봉쇄하였다. 분단 체제가 유지되는 한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노동운동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제 노동운동은 군사독재체제의 인적·제도적 청산을 위해 싸워 나가며 냉전 체제의 사고와 의식 그리고 국가보안법 등 법적 방해물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2. 96년 정치 정세 전망

1) 현 정치 정세의 특징

세계화로 시작하여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이라는 과거 청산으로 마무리된 95년은 어느 시기보다 격변의 한 해였다. 이같은 변화의 밑바탕에는 97년 권력 교체기를 앞둔 집권 세력과 야당 그리고 민족민주세력의 치열한 경쟁과 대립이 깔려 있다.

1995년의 정치 흐름을 좌우한 것은 6.27지방 선거에 따른 여권의 참패와 김대중씨의 정계 복귀였다. 민자·민주의 양당 정치 구도가 지자제 선거를 경과하면서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이라는 4당 체제로 변화하였다. 불안정한 4당 체제와 이에 대한 집권 세력의 공세는 이후 전개된 정치 변화의 동인(動因)이었다.

노태우의 부정 축재, 5·18 특별법 제정, 전두환 구속은 95년 하반기의 특징적 사건이었다. 비자금 정국으로 시작된 일련의 정치적 상황은 권력투쟁 그 자체이며, 누구도 이를 김영삼 정부의 민주화와 개혁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지 않는다. 현 정부의 이 극단의 선택은 6.27선거로 조성된 정치적 위기에 대한 김영삼 정권의 대응 전략이며, 궁극 목표는 지자제 선거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 즉, 김대중씨의 은퇴를 노린 것이었다.

현 상황은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하여 왔던 군사지배체제가 무너지고 기존 정당 체제가 재편되는 시기이다. 지배 세력의 야합인 민자당체제가 파산하고 이에 대

용하여 집권 세력에 대한 정치적 피해자로서 정당성을 유지하여 왔던 야당이 분열 제편되는 과도기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시기 한국의 정치 체제는 냉전적인 분단체제 아래에서 외세에 의해 정치, 군사적 영향을 받는 군사독재체제였다. 이 결과 한국의 사회, 정치 전반은 분단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법과 제도에 의해 일체의 정치적·사회적 권리가 부정당하였다.

그러나 군사 정권이 국민의 민주화 투쟁으로 정치적인 후퇴를 하고 민간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김영삼 정부의 등장은 이를 잘 표현하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군부정권의 태 내에서 탄생한 민간정권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군부 세력과 야합하여 정권을 획득하였지만 이후 5, 6공 전직 대통령을 구속함으로써 정권의 속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전 정권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지배블럭 내부의 주도권이 군부에서 독점자본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현 정권이 친재벌적 '신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나 민간 정권임에도 군사 정권과 같은 노동단압 정책을 구사하는 배경은 여기에 있다. 현정부는 집권 초기 공직자 재산공개, 하나회 철폐, 전향적 통일 정책, 금융실명제 실시 등 각종 개혁정책을 취하였으나 1년도 가지 못해 그치고 말았다.

이번 전직 대통령 구속도 법적, 제도적 개혁을 통한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아닌 통치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함으로써 그 의의를 반감시켰다. 이 결과 군부 통치의 경제적 기초를 제공했던 부패한 재벌들에게는 정치적 면죄부가 주어지는 상황으로 마무리되었다. 5.18정국 처리에서 잘 나타나듯이, 현 시기는 민간보수진영이 정국을 주도하지만 수구 반동 세력의 저항과 재할 기도가 지속되는 복합적인 국면이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사독재체제의 후퇴와 함께 민주 대 반민주라는 대치 전선이 약화되고⁹⁾야·야할 것없이 보수·수구화하는 특징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거 청산이 개혁 세력의 힘에 의해 추동되기보다 보수 세력간의 권력투쟁의 형태로 전개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 분명해진다. 5, 6공 청산은 그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수구·기득권 세력의 퇴진, 즉 보수세력의 위기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의 현실은 그와 반대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수구세력을 뒷받침하는 보수화된 정치세력은 의연히 실체를 유지·강화하고 있으며, 그간 국민의 개혁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렴하였던 야당조차 보수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 상황은 이처럼 과거 청산작업을 통해 수구·보수세력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지만, 이것이 개혁진보세력의 성장을 의미하지

9) 현재의 정세는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구도하에서 보수대 진보라고하는 한 차원 진전된 정치 지형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과도기)로 볼 수 있다(황인성(1996), 「한국 사회의 현대적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에 대하여」, 「민주노총 창립기념 토론회: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않는 정치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이것은 개혁진보세력과 국민의 힘이 취약해서라기 보다는 그것을 조직할 수 있는 정치력의 결핍 때문이다

6·27 지자체 선거 이후 정치 흐름은 3김이 주도하는 보수 정치, 계보 정치, 지역주의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안적 정치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 96년 정치 전망

1996년은 95년에 진행된 정치 흐름의 연장선에서 파악할 수 있다. 현 정부의 향후 정치 변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월 9일 있었던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 개헌 불가를 주장하면서 6대 국정 과제를 제시하였다.¹⁰⁾

이번 국정 연설은 가변적인 정치질서를 예상하듯 뚜렷한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95년과 같은 청산 작업의 가속화나 민주개혁의 청사진 그리고 남북 관계와 통일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과거 청산' 작업은 막을 내리고 '안정과 성장' 이데올로기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신한국당의 공천 작업이나 지도체제 개편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래를 향한 희망찬 진진'은 '과거 청산'이라는 국민적 개혁 과제를 무마하는 논리이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재판 후 곧 석방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나의 잘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널리 퍼져 있다.

이처럼 96년 김영삼 정부의 정책은 이전과 같이 경제 논리를 앞세운 노동 탄압 정책, 조직화된 사회 세력을 배제한 개별화된 단위(국민)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주를 이룰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상징 조작적인 몇 가지 개혁(?)조치로¹¹⁾ 중간층을 포섭하고, 기층 민중을 물리적으로 탄압하는 강권 통치를 전개할 것이 예상된다.

1996년¹²⁾은 김영삼 정부 집권 4년을 맞이하는 해로, 4월의 국회의원 총선, 97년 대통령

10) 96년 국정의 6대 과제는 ① 통일 앞당김 기반 조성, ② 선진 경제 기틀 다지기, ③ 핵심 제도 지속적 개혁, ④ 삶의 질 향상에 주력, ⑤ 사회간접자본 확충, ⑥ 세계 질서에서의 능동적 참여 등이다.

11) 청와대 박세일 수석은 95년이 정치개혁의 해였다면 96년은 '사회복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개혁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행정조직 통합, 규제 완화, 중소기업 보호, 교육 및 사법 개혁 등은 총선과 관련된 주요 개혁 정책의 내용으로 예상된다.

12) 96년 한국 정치에 영향을 끼칠 주요 정치 일정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4월 15일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2월에는 신한국당(2월 6일)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준비되고 있으며, 2월과 3월에 연속적인 전두환·노태우의 재판이 준비되어 있다. 남북관계에서는 상반기를 기점으로 북한과 미국사이의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가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반기로 접어들면 6월과 11월에 러시아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령 선거, 98년 지자체 선거 등 연속적인 선거 일정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정치 일정이 보여주듯 앞으로의 정치 상황은 현 정권의 안정적인 정권 이양과 이에 대항한 정치세력간의 한 판 승부를 예견하고 있다. 4월로 예정되어 있는 15대 국회의원 선거는 권력 교체를 앞둔 전초전의 의미를 갖는다.

총선은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의미를 가지며, 기존 4당에 대한 국민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우리 노동자와 근로 민중에게는 정치 세력화를 준비하는 첫 실천의 장이다.

총선을 전후한 정치권의 변동은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 결과는 향후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각종 여론 조사는 4.11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일지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여소야대 국회의 탄생과 그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적 투표 형태이다. 우리 나라 선거 제도는 직능별 대표에게 의석을 배분한다는 명분 하에 전국구 제도를 두고 있으며, 기존 정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승자 독식(勝者獨食)의 소선거구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은 더욱 부추겨지고 있다.¹³⁾

총선 결과에 따라서 현 4당 체제와 3김 경쟁구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각 정치 세력간 이합집합에 의한 정계 개편이 예상된다.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와 신한국당 패배로 나타났을 때 정계 개편과 개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정계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든 실제로는 보수 정치 세력의 재편에 불과하며,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사회·정치적 지위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 더욱이 이 정계 개편은 차기 집권을 위한 전략적인 모습으로 노골화될 것이기에 그 위험성은 더욱 높다.

대통령의 개헌 불가 선언에도 불구하고 97년 권력 교체기를 향한 개헌 논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관계의 변화도 이 개헌 논의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3) 노조 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기약하며

현 정치 상황에 대하여 노동운동은 어떠한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는가? 민중, 군사 독재·수구 세력의 정치적 부활을 저지하고 과거 청산을 위한 민주화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전히 반쪽에 머물러 있는 사상, 표현, 결사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고,

13) 국회의원 선거구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총계	전국구	지역구	서울	경기인천	강원제주	대구경북	부산경남	대전충남북	광주전남북
299	46	253	47	49	16	32	44	28	37

3차 개입, 국가보안법 등 군사 통치의 유물인 악법이 노동운동을 짓누르고 있다. 노동자는 군사 통치아래에서 빼앗긴 자유와 권리를 찾고 이 구조를 유지시켜 온 분단 체제의 극복을 위한 전진을 이루어야 한다. 한국 사회를 왜곡시켜 왔던 냉전 체제의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조합의 적극적 대응은 노동자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역사적 과제이다.

또 다른 과제는 노동자와 민중의 이해에 기초한 정치세력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개혁은 '산별노조와 정치세력화'라는 조직적 무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전·노 구축의 정치 흐름이 보여주듯이 현재 보수 정치 세력은 개혁을 특정 영역 속에 가두면서 진정한 개혁 정치의 출발을 제약하고 있다. 총선 공천에서 드러나듯이 보수 정치가 기존의 개혁 및 진보 세력이라 인식되었던 사람들을 분리·견인함으로써 개혁·진보 세력의 독자적 세력화는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정치세력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아직 정치를 남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남아있으나 앞으로도 정치를 수구 기득권세력과 자본의 품안에 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세력화를 통한 정치구조 개편이 분단구조하의 한국사회에서 단기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사실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 이를 이루기 위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표 수립과 합의, 이에 기반한 착실한 준비와 성과의 축적을 목적 의식적으로 추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여타 사회세력과의 개방적 연대의식과 협력관계를 구체적 실천을 매개로 하여 끊임없이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새정치'는 세대 교체가 아닌 정치적 세력관계의 교체를 의미한다. 이것은 지역주의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계급 정치에 의해서만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새정치'는 정치 사회적 세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 계급적, 세력적, 조직적, 이념적 대안 제시를 필요로 한다.¹⁴⁾

한편 정치세력화의 첫 실천의 장이 될 4월 총선에 대한 기본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노동운동의 생명은 단결이고 이를 통해서만 다수의 힘을 조직하고 동원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총선 대응도 이처럼 대중 주체의 원칙과 방향이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총선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아무리 취약하다고 해도 무엇보다도 우선,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관점에 입각하여 선거에 대한 단기 목표와 장기적 과제를 조직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지난 지자제 선거와 같이 단기적 활동에 머무는 것이 아닌, 노동운동의 장기적 발전 전망과 결합된 정책과 힘의 동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번 총선은 또한 위와 같은 장기적인 방향 설정과 함께 투쟁과제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별 위주의 기득권 옹호 정책으로 노동자를 억압하려는 정당에 대한

14) 정대화(1995), 「현정세의 성격과 정치 세력의 동향」, 「동향과 전망」, 겨울호

투쟁을 적극 전개하여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임·단투, 노동법 개정, 사회개혁투쟁에 유리한 정치 환경을 만들어 내야 한다. 노조활동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 창의적인 정치활동을 직장, 지역, 거리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모든 세력을 포괄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지역단위 대책기구의 수립은 무척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물론 이런 활동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후보 지원활동과 적극적으로 결합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이번 총선 기간을 통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힘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12조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¹⁵⁾

급변하는 정세는 노동조합 활동의 영역 확대와 그 깊이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87년 이후 전진해 온 노동조합의 요구와 투쟁을 보아도 분명하다. 노동자는 직장과 사회의 주인에서 이제 정치의 주인으로 도약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한국 사회 변화와 근본적 개혁의 출발점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강화일 수 밖에 없다. 이는 경제 투쟁에 머물러 온 노동조합의 사회·정치적 지위 향상에도 큰 몫을 담당할 것이다. ■

15)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12조 1,2,3항은 '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과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다' '정치활동의 목적 토대인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도 없고'(2항) '조합원의 결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기금조차 정치자금에 유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항 중 제5호에 노동 단체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통합 선거법으로 불리는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19조, 제 87조, 제255조 제 1항 11호에서는 현존하는 모든 단체를 국가기관, 정당, 그리고 사회단체로 구분하여, 사회단체 등은 공명선거 추진 활동에 한해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다.